

전남도, 다음달 2일까지 방역 강화한다

최근 전국적인 확산세 차단하기 위한 조치

유흥시설·카페·노래연습장 불시단속 강화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5월2일까지 1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주간은 최근 전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 선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줄이려는 조치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축제 등을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나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한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공공부문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단속한다. 민간부문에도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한다.

특히 집단감염 비중이 1월 중순 13.6%에서 3월 말 67.1%로 증가세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5월7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개로 2주 간 집합금지 조치,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도 제외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확진자가 800명 선을 위협하고 있어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도민들도 이번 한 주 동안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6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

자는 1040명으로 지역감염이 959명, 해외유입이 81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총 13만 3479명이다. 1분기 대상자 6만1875명 중 5만2407명(84.7%), 2분기 대상자 26만1529명 중 8만172명(31.0%)이 접종을 완료했다.

김정환기자

완도해경, '수협 정책보험'보험사기 일당 11명 검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완도군 일대에서 2020년 5월경 자연재해(조수격차)로 인해 다시마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수협중앙회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A씨(남, 71세)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2020년 9월경 수협중앙회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약 6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 등이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였음을 밝혀냈다.

이들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수확철인 5월경 대조기(밀물이 가장 높음)를 택하여 양식장 지지 로프를 절단하는 수법으로 양식시설물 손괴 후, 마치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씨 등은 총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하였고 이들이 편취하려 한 금액은 약 4억원대로 확인되었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주 남부소방, 현장대응능력 강화인명구조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는 불철 산악사고 대비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지속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가활동 선호도 증가와 불철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원 구조역량을 강화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사고유형별 표준대응절차에 의한 구조기법(수직구조, 수평구조 등) 연마와 인명구조용 등질 결합·로프 결속 등이다.

박치현 119구조대장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정확하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 논의 오늘 재개...선거인단 결론 관심

대한체육회·변협...체육회 선거 규정 견해 달라

광주 구체육회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연기됐던 시체육회장 보궐선거관리위원회 논의가 재개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인단 규정'을 확정할 것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한차례 연기됐던 선관위 논의가 27일 열린다.

논의에서는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할 각 종목단체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날 민선 1기

김창준 회장이 임기 2년여를 남기고 사퇴해 민선 2기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다음달 13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어 9명의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지만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 일부 종목단체가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는 의제기했다.

당초 시체육회는 60개 종목단체에 각각 2표를 부여해 120표, 5개 자치구 체육회에 100표를 배정했다.

또 3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 원칙에 의해 등록된 종목단체 중 27개에

투표권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선수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13개로 제한해 문제가 불거졌다.

추가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한 14개 단체는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선관위는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 등에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자문했다.

또 최근에는 구체육회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시체육회 직원 등과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주 예정된 선관위 논의가 연기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의 답변을 토대로 선거인단

구성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는 선거인단 구성 규정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선관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추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체육회 보궐선거는 2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된 뒤 다음달 2일과 3일 후보등록 10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13일 투표가 이뤄진다.

현재 3명의 후보가 등록 전부터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윤희기자

무안소방, 봄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컨설팅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화재 예방을 위해 불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컨설팅을 운영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공사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방점검 및 예방 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쳤으나, 일부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무안소방서는 관내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공사장 및 특정소방대상물(1급, 2급)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전 사전신고도록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화재예방 컨설팅 지원센터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용접·용단 안전 매뉴얼 배부 ▲화재감지자 의무배치 ▲임시소방시설 안내(매뉴얼 보급) 및 위험물 안전관리 확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한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공사장은 화기 취급과 가연성 물질 사용 등의 요인으로 화재위험성이 높다”라며 “공사장에서의 화재 예방은 관계자들의 협조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안=이가성기자

(주)LG화학·여수소방,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식 열어

(주)LG화학과 여수소방서는 20일 여수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취약계층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예방으로 각종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여 여수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사회 취약계층 화재예방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LG화학과 여수소방서 양 기관은 여수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뜻이 맞아 매년 1,000만원 씩 4년 간 총 4,00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차 소화기, 감지기)을 여수시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상호협력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여수=오상호기자

“주식 수익금 50% 주겠다” 2억8800만원 가로채

주식투자 사기 40대 징역 1년6월에 3년 집행유예

주식 전문가로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 징역 1년6월에 3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2억8800

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직접 주식투자 해주겠다. 원금 확실히 보장되고 수익 발생하면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었던 피

고인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급등 주 위주 단타 매매 하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깝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